

다산포럼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은 많은 이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의 당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주의의 퇴보인가? 아니면 반이민 정서, 혐오의 확산, 여성의 유리천장의 존재,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 부상 혹은 민주당 엘리트와 노동자 계급의 괴리 때문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국가 간 장벽이 높아지고 포용적 민주주의와 기후위기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정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대선 이후 미국 영화 존 큐(2002)가 떠올랐다. 철강 회사의 노동자인 존 큐는 작업량 감소로 비정규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보형 혜택도 축소되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의 아들은 심각한 심장병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지만 보험 자격의 문제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한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존 큐는 병원을 쫓겨해 인질극을 벌이고 결국 자살을 택하며 아들은 수술을 받게 된다. 이 영화는 라스트 벨트의 자동차, 철강 산업이 동아시아로 이전되는 세계화 시기에 미국 노동자들의

트럼프가 돌아왔다

삶이 얼마나 불안정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은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 조언하며, 단순히 여성의 재생산권 보호 중심의 캠페인과 트럼프의 악마화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다라든가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과 불안, 치솟는 물가, 그리고 일상적 무력감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승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샌델은 트럼프 지지층을 적대시하지 말고 그들의 분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언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인권 연구자에 대한 '이슈 파이팅'이 혐오와 분노의 정치에 쉽게 선포되는지 늘 고민한다. 나치는 유대인을, 한국에서는 빨갱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극단적 정치의 이면에는 불안이라는 사회적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으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불안과 분노는 사회적 정서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분노와 불안을 동원할 줄 아는 정치인들은 언제나 등장하며 이들은 적을 만들어 불안과 분노를 배설할 출구를 마련한다.

실리칸밸리 사는 친구 말로는, 미국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의 기준을 '해고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몇 달간 재워주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고 한다. 이는 해고, 주거 불안, 의료 접근의 어려움, 그리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미국 사회의 불안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의 정치는 이런 불안을 자양분 삼아 썩속 자랐고 사람들의 분노를 이민자에게 돌렸다. 그는 불안과 분노에 귀 기울이는 척, 최악의 해결책을 최선인 것처럼 포장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며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가계 대출 증가, 물가 등 민생 문제뿐 아니라, 불평등, 지역 격차, 높은 자산률과 산재 사망률,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동력의 둔화, 공급망 질서의 재편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AI 전환 등 충격에 대한 사회적 대응도 지체되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20세기의 누적된 문제와 미래의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타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정치는 응답하고 있는가?

정권의 무능과 불통에 분노한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과 임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 촛불시위의 열망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현되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시간이다. 촛불 광장에서 터져 나온 다양한 목소리와 염원이 과연 진보적 정책과 사회 변화로 연결되었는가?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해 광장의 정치가 독점되었는가? 기성정치는 촛불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했는가? 촛불 이후 정치의 공과 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동원하는 또 다른 '트럼프'는, 혹은 점수사를 국정 제일 조연자로 삼는 기괴한 정부는 언제든지 등장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책임있는 정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며 또한 분노를 상대진영에 대한 적개심으로 소진하지 말고 정의와 공공성의 언어로 조직해야 한다.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방향성을 찾아 길을 만들어갈 때이다.

기고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해야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부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은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평야 긴 해안선을 보유한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 전환에 핵심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지난 수십 년 간 호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2GW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발전량은 22GWh에 달한다.

호남의 연간 전력량은 279만7279Toe로 전국 연간 재생에너지 전력량의 38.0%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대부터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금융지원 사업이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등의 중대한 국가 정책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

선진국에서도 테이니스 예코 이노베이션 프로젝트(DEIP·보조금 지원, 기술개발, 테스트, 수출 등)와 최

근 유럽 9개국이 발표한 오스텐트 선언 등의 다양한 정책이 각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의 실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중 오스텐트 선언은 2050년까지 원화 약 1178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최소 300GW로 확장하겠다는 것으로 발전 규모는 원자력 발전소 300기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67%를 넘어선 수준이며 세계 최초 재생에너지 100%인 산소섬 프로젝트 성공시켜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6.7%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인 1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이며 연간 지원 예산은 0.5조원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6%로 낮추고 발전 사업자의 RPS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볼 때 국제사회 화두인 2050 탄소중립 기조에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특히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미국·중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이 예견돼 향후 수출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규모 에너지 산단을 조성하고 지역 모든 공장에 태양광 비용을 지원하면, 탄소세 대응과 기업의 RE100 준수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호남은 태양광 발

전소 중 사업이 개시된 곳은 약 42% 불과하며 송전망 부족과 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발전 사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급히 송전망을 확충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허가해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기 충전소 설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과 전기 소모가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에너지 연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 육성 효과는 앞서 호남에서 시도한 사업 성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주민 참여제도와 이익공유제로 풀려났으며 농업과 재생에너지 공존뿐만 아니라 농어촌 가정에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태양광 이익금을 배당한 신안군의 경우 2021년부터 섬마을 전입자가 매년 2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호남의 재생에너지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 이상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안해 정부가 호남을 재생에너지 특구로 지정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 지역으로 키워 주시길 요청 드린다.

호남 재생에너지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社說

이슈 파이팅 없는 '겉핥기 행감' 언제까지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됐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첫 행감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만족스런 평가를 받기는 힘들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지난 1년간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지역 현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회의 행감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 파이팅(issue fighting)'이 부족했다고 할 것이다. 광주 공군항 이전과 복합쇼핑몰, 인공지능 교통 문제 등 현안이 넘쳐나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감공전 전 문화경제 부서장에 대한 'GGN 글로벌광주의 출연료 특혜 지적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 테크노파크 성병보 직원 녹장 징계 지적 등 일부 상임위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전문성을 노출하는 질문이 많았다. 전문성이 없다면 겉핥기식 행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노출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부족과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시의원들이 두 차례나 감사를 중단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대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이슈 파이팅을 못한채 따른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허위 자료까지 제출하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피감기관들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잘못된 점을 찾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은 피감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광주시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의 행정료 특혜 지적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 테크노파크 성병보 직원 녹장 징계 지적 등 일부 상임위의 성과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광주·전남 지자체 교통사고 취약 오명 벗어야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전국 하위권 지역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3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서구·북구·광산구가 D등급, 전남에서는 영암군이 E등급, 담양·진도·화순이 D등급으로 분류됐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에 따라 분석하고 인구 수, 도로 연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E등급으로 분류된 영암군은 군 단위 80개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80.89점)보다 7.81점 낮은 73.08점을 받았다. 교차로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과속(55.94점), 신호 위반(55.51점), 중앙선 침범(70.16점) 등 운전자 영역 점수도 전국 평균(78.96 안팎)을 크게 밑돌았다. 담양군도

77.14점(E등급)으로 80개 지자체 중 75위에 해당했으며, 진도군(78.25점·D등급)은 70위, 화순군(78.82점·D등급)은 68위에 머물렀다.

광주시에선 광산구가 75.83점(D등급)으로 전국 69개 자치구 중 61위를 기록했고 서구는 77.96점(D등급)으로 전국 46위, 북구는 77.41점(D등급)으로 전국 49위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유형과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이번 교통안전지수는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는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에 나타난 취약영역과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보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예방조치는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사·도민들udo 교통법규를 지키는 등 교통안전 실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하루에 몇 번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언제부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 거짓말을 적게 하는 게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

거짓말과 관련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다. 꽤 많이 알려진 연구가 하루 평균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 지 여부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제리 제리스 심리학교 교수팀은 사소한 거짓말까지 포함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회,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밝혔다.

EBS는 하루 평균 세 차례 튀어나오는 거짓말을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내놓기도 했다. 횡수의 차이일 뿐 매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다.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도 거짓말이 정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내 달 정도 말했는데 손실

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내 장모는 남에게 심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 등이 대표의 선고와 대비돼 형성성 논란을 낳고 있다. "선거 이후 명태균씨의 통화 사실이 없다"거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 논란도 뜨겁다.

정치 지도자의 말이 중요한 건 무게와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오죽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가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합의를 계기로 '2026학년도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30년 숙원'인 '국립 의대 설립'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입에 담말이 있는가 하면 쓴말도 있다. 싱거운 말도 있다. 안중유골, 씹히는 말도 있다. 뒤집거나 먹는다고도 한다. 지도자라면 말의 무게를 잊지 말고 보여줘야 한다.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NGO 칼럼

앓은 앓음이다

인간으로서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되돌아보면 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내 아이가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결국 성소수자를 궁지로 내모는 것은 사회의 무지와 무관심, 젠더교육이 전무한 한국교육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부모님이 널 낳은 걸 후회하겠다", "너희들이 태어난 거 자체가 재앙이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언어가 비수가 되어 쏘인다.

실제 성소수자들의 부정적 사회적 경험은 성소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2016년 김승섭 교수팀의 '한국 성인 동성애자·양성애자 건강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구 집단보다 우울증상 유병률이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거나 실제 시도한 비율도 일반인구의 6~7배였고, 집단에 따라서는 일반인구의 최고 37.6배(양성애자 남성의 자살 시도 유병률)를 기록했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엘라이(ally·성소수자 인권 지지자)'가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와 직장, 사회에서 듣는 혐오 발언에 맞서서 다수이면서 기득권을 가진 우리가,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차별받지 않고 행복

할 권리가 있음을 주변에 드러냄으로써 사회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을 앞당길 수 있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혼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느껴 마땅한 혼란이다. 논란이 있어야 논의가 가능해지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근본적인 이해와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광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옥합교회에서 '호남지역 성소수자 부모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 당사자와 부모, 엘라이가 매달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성소수자 당사자와 그 부모들에게 보수기독교의 혐오 발언이 배척이자 공포였던 만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옥합교회는 단순한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언젠가 퀴어문화축제 '프리허그(FREE HUG)'를 하던 중 안졌던 친구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아이가, 그리고 내 아이가 가진 수많은 정점이 그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가려지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벽장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 불편해도 괜찮다는 이웃의 목소리가 한 겹씩 포개질 때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洵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